

---

## 2018년 연정과제 추진현황 보고

---



**기획조정실**

## ■ ■ ■    목    차    ■ ■ ■

|  |          |
|--|----------|
| <b>I. 연정과제 추진계획</b> .....                | <b>1</b> |
| 1. 일반현황 .....                            | 1        |
| 2. 주요 추진성과 .....                         | 1        |
| 3. 문제점 및 대응방안 .....                      | 2        |
| <b>II. 연정과제별 사업계획서</b> .....             | <b>3</b> |
| 1-2. 재정전략회의 기능 강화 .....                  | 4        |
| 1-3. 연정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           | 5        |
| 41. 일자리 노동국 신설 .....                     | 7        |
| 63. 수도권 규제합리화를 위한 선제적 방안 강구 .....        | 8        |
| 99. 범죄사각지대 CCTV 설치 .....                 | 11       |
| 162. 환경정책 일원화를 위한 직제개편 .....             | 13       |
| 196. 경기도 인구정책 조정회의 구성 .....              | 15       |
| 212.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                | 17       |
| 213. 공공데이터 민간 개방, 데이터산업 활성화 지원 등 .....   | 19       |
| 264. 경기도 부지사 사무분장 규칙 개정 .....            | 22       |
| 265. 연정부지사 평가 기회 마련 .....                | 23       |
| 266.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                    | 24       |
| 268. 사무위탁 시 도의회 의결, 조례 및 법령 개정 .....     | 27       |
| 269. 책임부단체장 도입 관련 법령 개정 .....            | 28       |
| 271. 특별조정교부금 연정부지사 보고 .....              | 30       |
| 272. 실국별 예산한도 재조정 및 분야별 전국 평균수준 추진 ..... | 31       |
| 274. 지역발전특별회계 등 도비 지원기준 재정립 .....        | 32       |
| 275. 경기도 공공투자관리 센터 설립 검토 .....           | 33       |
| 276. 도 30억원 이상 신규사업 사전협의 .....           | 35       |
| 279. 전국 평균 의회 인력 확보 .....                | 36       |
| 280. 입법정책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인력권한 확대 .....      | 38       |
| 282. 입법정책연구비, 의정활동보고 예산 수립 .....         | 40       |
| 283-1. 의원보좌관제 도입 공조 .....                | 41       |

# I. 연정과제 추진계획

## 1 일반현황

□ 과제 현황 (단위 : 건, %)

| 과제수 | 예산사업 | 비예산 | 평균추진율 | 비고 |
|-----|------|-----|-------|----|
| 24  | 6    | 18  | 85.7% |    |

□ 연정 예산현황 : 15,061백만원

## 2 주요 추진성과

- 경기연정시스템 확립, 연정 전반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 추진
  - 연정협의회기구 운영지원 및 원활한 연정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인력 지원
    - 연정협상과정 참여지원, 연정위원장 제도 도입, 연정실행위원회재정전략회의 등 연정협의체 운영지원, 연정협력국·일자리노동국 등 신설
  - 일반도민·시민단체, 전문가, 도의원, 공무원 등 사회 각층을 대표하는 4개 그룹 120명의 '경기연정 모니터링 평가단' 구성 운영
    - 연정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중간평가 완료('17.8월~11월)
    - 연정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연정부지사 및 연정위원장 제도, 연정협의회기구의 역할 등 연정시스템 평가 추진('18.1월~3월)
- 「경기도 인구정책 조정회의」 운영 및 인구변화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기존의 복지정책을 넘어 일자리·주거·교육 등 관련 정책과 기획·조정기능을 융합하는 전국 최초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경기도 인구정책 조정회의」 신설
    -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개정(3.13) 및 저출산·고령사회에 융·복합적·선제적 대응
  - 「경기도 인구정책 5개년 계획」 수립, 인구영향평가 모델 개발, 인구정책 평가지표 개발 등 인구변화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마련('18.4월)
    - ※ 인구정책분야 대통령상 수상('17.11.30), SIB 아이디어 공모대회 우수상 수상('17.12.28)

- 1 -

- 연정협의체 '재정전략회의' 운영 및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추진
  - 연정정책과제의 효율적 예산편성·집행을 위한 '재정전략회의' 구성 운영
    - 분기 1회('17년 5회 개최), 연정예산 최우선 편성 등 소통과 협치 강화
  - 대규모 재정투자의 건전성·효용성 제고를 위해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18.1.4)
      - ※ 경기연구원 정관 개정 및 조직 신설 및 인력 확보 후 '18.6월 개소
- 도민의 정보격차해소 등 통신복지 실현,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통해 소외계층 통신비 부담완화 및 정보격차 해소
    - '17년 3개 시·군(안산,부천,양주) 7개소 완료 \* 수원 2개소 '18년 이월
    - '18년 9개 시·군(수원,고양,남양주,용인,안산,군포,안성,양평,동두천) 98개소 예정
  - 범죄발생 우려지역 및 어린이 안전 CCTV 748개소 2,592대 설치 완료
    - '16년 23개 시군 300개소 1,039대 / '17년 31개 시군 448개소 1,553대
    - '18년 31개 시군 366개소 1200여대 설치 예정
- 빅데이터 오픈플랫폼을 통한 과학적 도정 구현
  - 공공데이터 민간개방(1,400여종), 빅데이터 분석 사업(29건) 추진
    - ※ 공공분야 빅데이터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16.11.10.행자부)
  - 전국 최초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15.3.3) 및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15.10.13)
  - 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생태계 조성 지원
    - 빅데이터 전문인력 배출 803명,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 발굴지원 20팀
      - ※ '16년 9팀 5억 7천만원, '17년 11팀 33억 3천만원 투자유치

## 3 문제점 및 대응방안

- 법령개정, 기준인건비, 이해관계자간 대립 등의 문제로 처리 지연
  - 중앙부처 건의, 국회의원 협력, 이해관계자 간 협의·중재 등 다각적 대응 필요
    - ※ 수도권 규제합리화, 환경정책 일원화, 공공기관 통폐합, 책임부단체장 도입, 의회 인력·권한 확대, 의원보좌관제 도입 등

- 2 -

## II. 연정과제 사업계획서

### <연정과제 목록>

(단위 : 백만원)

| 연정<br>번호 | 사 업 명                      | 담당부서      | 최종 예산액 |        | 2017<br>추진율 | 비<br>고 |
|----------|----------------------------|-----------|--------|--------|-------------|--------|
|          |                            |           | 2017   | 2018   |             |        |
| 계        |                            |           | 17,290 | 15,061 | 85.7%       |        |
| 1-2      | 재정전략회의 기능강화                | 예산담당관     | -      | -      | 100         |        |
| 1-3      | 연정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 기획담당관     | -      | -      | 60          |        |
| 41       | 일자리노동국 신설                  | 기획담당관     | -      | -      | 100         |        |
| 63       | 수도권 규제합리화를 위한 선제적 방안 강구    | 규제개혁추진단   | -      | -      | 85          |        |
| 99       | 범죄사각지대 등 CCTV 설치           | 정보통신안전담당관 | 9,850  | 8,066  | 100         |        |
| 162      | 환경정책 일원화를 위한 직제개편          | 기획담당관     | -      | -      | 70          |        |
| 196      | 경기도 인구정책 조정회의 구성           | 미래전략담당관   | 150    | -      | 100         |        |
| 212      | 공공 와이파이(WiFi) 서비스 제공       | 정보통신안전담당관 | 515    | 860    | 82          |        |
| 213      |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데이터산업 활성화 지원 등 | 빅데이터담당관   | 5,227  | 3,355  | 100         |        |
| 264      | 경기도 부지사 사무분장 규칙 개정         | 기획담당관     | -      | -      | 100         |        |
| 265      | 연정부지사 평가 기회 마련             | 기획담당관     | -      | -      | 10          |        |
| 266      |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 평가담당관     | -      | -      | 70          |        |
| 268      | 사무위탁 시 도의회 의결, 조례 및 법령 개정  | 기획담당관     | -      | -      | 100         |        |
| 269      | 책임부단체장 도입 관련 법령 개정         | 기획담당관     | -      | -      | 70          |        |
| 270      | 연정예산 최우선 순위 편성             | 예산담당관     | -      | -      | 100         |        |
| 271      | 특별조정교부금 연정부지사 보고           | 예산담당관     | -      | -      | 100         |        |
| 272      | 실국별 예산한도 재조정, 전국 평균수준      | 예산담당관     | -      | -      | 100         |        |
| 274      | 도비 지원 기준 재정립               | 예산담당관     | -      | -      | 100         |        |
| 275      |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검토         | 예산담당관     | -      | 1,500  | 100         |        |
| 276      | 30억원 이상 신규사업 사전협의          | 예산담당관     | -      | -      | 100         |        |
| 279      | 전국평균 의회 인력 확보              | 기획담당관     | -      | -      | 80          |        |
| 280      | 입법정책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인력 권한확대   | 기획담당관     | -      | -      | 60          |        |
| 282      | 입법정책연구비, 의정활동보고 예산 수립      | 예산담당관     | 1,548  | 1,280  | 100         |        |
| 283-1    | 의원보좌관제 도입 공조               | 기획담당관     | -      | -      | 70          |        |

- 3 -

### 1-2 재정전략회의의 기능 강화

제3조(연정실행기구) ① 정치안정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소통하며 상생과 통합의 정치로 도민행복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추진한다.  
3. 연정합의문과 관련된 재정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사전검토심의역할을 담당하는 **경기도 재정전략회의의 기능을 강화**한다.

| 기획재정위원회         | 도 직접 | 비예산                | 신규/계속         | 추진율 : 100% |
|-----------------|------|--------------------|---------------|------------|
| 예산담당관 전하식 ☎2120 |      | 주민참여예산팀장 정재진 ☎2844 | 담당자 김용현 ☎2123 |            |

#### □ 사업개요

- (목적) 연정정책과제의 효율적 예산편성·집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 (구성) 현원 23명(정원 35명 이내)
  - 의장(연정부지사), 도의원(8명), 연정위원장(5명), 전문가(6명), 집행부(3명)

#### □ 추진상황

- 경기도 재정전략회의의 구성·운영(안) 보고('17.2.14 연정실행위 개최시)
- 재정전략회의의 위원 확대 구성 및 '17년 재정전략회의의 운영계획
  - \* 위원 확대 : 20명 → 22명(전문가 2인)

#### ○ 회의 개최(5회)

| 구 분        | 일 시        | 협의 내용  |
|------------|------------|--|
| 제1차 재정전략회의 | '17.3.29.  | - '17년 운영계획 및 추경재원 검토 보고<br>- '18년 본예산 편성계획 보고 등           |
| 제2차 재정전략회의 | '17.4.14.  | - '17년 1회 추경 연정예산 요구현황 보고<br>- 실국 주요사업 쟁점 보고               |
| 제3차 재정전략회의 | '17.6.9.   | - '17년 1회 추경 연정예산 반영현황 보고<br>- 연정예산 편성 방향 토론 등             |
| 제4차 재정전략회의 | '17.9.27.  | - '18년 본예산 연정사업 예산 요구 현황 등 보고<br>- '18년 연정예산 편성 절차 및 계획 설명 |
| 제5차 재정전략회의 | '17.10.20. | - '18년 본예산 연정예산 반영 현황 등 보고                                 |

#### □ 추진실적(성과)

- 연정사업의 충실한 이행과 성과도출을 위한 연정예산 최우선 편성
- 연정예산 사전협의를 통한 소통과 협치 강화

#### □ 기대효과

- 연정예산의 효율적 배분 실현 및 道 재정건성 강화

- 4 -

**1-3 연정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제4조(이행과 의무)** ④ 시민사회단체를 포함, 도민들이 연정의 전 과정과 합의의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와 도정 및 의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제도를 마련한다.

|         |          |     |    |           |
|---------|----------|-----|----|-----------|
| 기획재정위원회 | 도 직접(위탁) | 비예산 | 신규 | 추진율 : 60% |
|---------|----------|-----|----|-----------|

기획담당관 허승범 ☎ 2880, 정책조정팀장 홍성덕 ☎ 2810 담당자 명유신 ☎8008-5272

**□ 사업개요**

- (추진방향) ‘경기연정 모니터링·평가단’ 구성·운영을 통해 정치적·정책적 관점을 포함하여 연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
  - 도의원,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도민 등 참여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평가방법) 전문가 그룹(20명), 도의회 그룹(20명), 도민·시민단체 그룹(60명), 공무원 그룹(20명) 등 4개 그룹 120명 구성
  - 서면심사, 현장방문, 담당공무원 면담 및 그룹 토론, 전체 토론 등 2회 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 (주 관) 경기연구원
  - ☞ **소요 예산액 : 비예산(경기연구원 예산 활용)**

**□ 추진상황**

- 전문가, 도의원, 도민과 시민단체 등 3개 그룹별 평가 후 종합평가를 진행하는 방향 추진 검토(‘17.2.14 / 제1차 연정실행위원회)
- 전문가, 도의원, 도민(시민단체) 등 3개 그룹 120명 구성안 마련 (‘17.3.14. 제2차 연정실행위원회, ‘17.4.13. 연정사업 추진상황보고회)
- 2017.4.20. 「경기연정 모니터링·평가 추진 계획」 수립
  - 도의회 협의과정에서 ‘공무원 그룹’ 추가 의견 반영(박승원 대표의원)
- ‘경기연정 모니터링·평가단’ 평가위원 추천 의회(‘17. 5.29 / GRI→도의회, 도)
- 평가지표 전문가 의견수렴, 평가용 사업계획서 작성 등 (‘17.6월~7월)
- ‘경기연정 모니터링·평가단’ 구성완료(‘17.7.29)
- ‘경기연정 모니터링·평가단’ 오리엔테이션 개최(‘17.8.9)

- 5 -

- 사업설명회 및 현장방문 분과별 실시(‘17.9월 18일, 21일, 26일, 28일)
  - 분과별 5개 내외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2개 내외 현장방문 실시
- 분과별 평가표 작성 및 토론 실시(‘17.11월 7일, 9일)
- 그룹토론(‘17.11.14)

**□ 향후계획**

- 중간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최종평가 계획 수립

**□ 추진실적(성과)**

- 중간평가 추진 완료(‘17.8월~11월)
  - ※ 중간평가 결과 별도보고(경기연구원)

☞ **사업추진단계 및 추진율**

| 사업추진단계       | 배점 비율      | 2016 | 2017      | 2018 |     |     |     | 2019 |     | 종합 추진율    |
|--------------|------------|------|-----------|------|-----|-----|-----|------|-----|-----------|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
| <b>계</b>     | <b>100</b> |      | <b>60</b> |      |     |     |     |      |     | <b>60</b> |
| 기본계획수립       | 10         |      | 10        |      |     |     |     |      |     | 10        |
| 평가단 구성 완료    | 15         |      | 15        |      |     |     |     |      |     | 15        |
| 오리엔테이션 실시    | 10         |      | 10        |      |     |     |     |      |     | 10        |
| 사업설명회 및 현장방문 | 10         |      | 10        |      |     |     |     |      |     | 10        |
| 중간평가 실시      | 15         |      | 15        |      |     |     |     |      |     | 15        |
| 현장방문 등 모니터링  | 10         |      |           |      |     |     |     |      |     |           |
| 최종평가 실시      | 20         |      |           |      |     |     |     |      |     |           |
| 종합보고서 작성     | 10         |      |           |      |     |     |     |      |     |           |

**□ 기대효과**

- 도민들이 연정의 전 과정과 연정사업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연정평가시스템 운영
- 전문가, 도의원, 일반도민(시민단체 포함), 공무원 등 평가그룹을 구분 운영으로 다양한 의견수렴 및 평가의견 도출 가능

- 6 -

## 41 일자리노동국 신설

제12조(노동정책) ① 경제실 직제 개편을 통해 '일자리노동국'을 신설하고 「경기도 노동기본조례」를 조속히 제정시행한다.

|         |      |     |    |            |
|---------|------|-----|----|------------|
| 기획재정위원회 | 도 직접 | 비예산 | 신규 | 추진율 : 100% |
|---------|------|-----|----|------------|

기획담당관 허승범 ☎ 2880 조직팀장 류호국 ☎ 4091 담당자 김재한 ☎ 4092

### □ 사업개요

- 일자리노동국 신설
  - (경제실) 일자리정책관 → 일자리노동정책관으로 명칭 변경

☞ 소요 예산액 : 비예산

### □ 추진상황

-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일자리노동국과 노동정책과 신설

### □ 향후계획 : 사업완료

### □ 추진실적

- 일자리노동국 신설 : '16.11.1.
- 노동정책과 신설 : '17.9.29.

### □ 기대효과

- 일자리 창출 및 노동환경 개선 정책 추진 성과 제고

## 63 수도권 규제합리화를 위한 선제적 방안 강구

제17조(개성공단 물류 및 수도권 규제합리화) ⑤ 수도권 규제합리화를 위해 규제철폐 등의 선제적 방안을 강구한다

|         |      |     |    |           |
|---------|------|-----|----|-----------|
| 기획재정위원회 | 도 직접 | 비예산 | 계속 | 추진율 : 85% |
|---------|------|-----|----|-----------|

규제개혁추진단장 김종석 ☎ 4101 규제개선TF팀장 박성구 ☎ 4103 담당자 최인용 ☎ 4108

### □ 사업개요

- 정부 『2016 경제정책방향』과 연계하여 “동북부 낙후지역” 규제합리화 추진
  - ※ 지방은 “규제프리존”, 수도권은 “낙후지역 기업투자여건 개선” 연계추진

### ○ 도 규제합리화 주요 건의사항

- 자연보전권역 지정(84.7.11.) 前 기존공장 증설(부지추가 6만㎡이하, 건축면적100~200% 증설) 등
- 자연보전권역 계획입지 확대(6만㎡ → 30만~50만㎡) 및 연접개발제한 배제
- 특별대책지역 산업입지 규제 완화(집단화를 위한 산업단지 입지 허용)

☞ 소요 예산액 : 비예산

### □ 추진상황

- 자연보전권역(특대지역) 시·군, 국회의원,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규제합리화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국회정부 건의 지속 추진
  - 국토부 간담회(6회) 및 건의(7회), 국회건의(3회), 道대책회의(6회), 토론회(2회) 등
  - ※ 규제합리화 협업추진단(TF) 운영(16.1~12) : 기초실 총괄, 도시주택실·경제실·환경국 등
- 전문기관을 통해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의 논리개발 및 정부건의
  - 「자연보전권역 환경과 산업입지 Win-Win 방안 연구용역」(GRI, 2016.7)
- 공감대형성을 위한 관계기관 토론회 등 추진, 규제개선홍보자료 제작·배포
  - ※ 수도권 규제혁신 토론회(17.12.13), 환경부협의회 구성 및 간담회(17.9월~18.2월)
  - ※ 「2017 경기도규제지도」 제작·배포(17.8월, 3천부) : 도의회, 국회, 관계부처, 시군 등

### □ 향후계획

- 새정부 일자리창출 및 규제개혁 과제의 정부정책 반영 노력 계속
  - 관계부처(국조실, 국토부 등) 및 일자리위원회 등 건의, 관련 시·군 공동 추진

☞ 사업추진단계 및 추진율

| 사업추진단계        | 배정 비율      | 2016      | 2017      | 2018 |     |     |     | 2019 |     | 총합 추진율    |
|---------------|------------|-----------|-----------|------|-----|-----|-----|------|-----|-----------|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
| <b>계</b>      | <b>100</b> | <b>52</b> | <b>33</b> |      |     |     |     |      |     | <b>85</b> |
| 협업추진단(TF) 구성  | 5          | 5         |           |      |     |     |     |      |     | 5         |
| 연구과제 등 논리개발   | 10         | 10        |           |      |     |     |     |      |     | 10        |
| 현장방문 등 규제실태조사 | 10         | 6         | 4         |      |     |     |     |      |     | 10        |
| 규제개선 홍보자료     | 10         | 5         | 5         |      |     |     |     |      |     | 10        |
| 토론회·간담회 개최    | 20         | 14        | 6         |      |     |     |     |      |     | 20        |
| 정부 및 국회 건의    | 30         | 12        | 18        |      |     |     |     |      |     | 30        |
| 제도개선 정책반영     | 15         |           |           |      |     |     |     |      |     |           |

<주요 사업단계별 목표>

- ▶ 협업추진단(TF) 구성 : 수도권 중첩규제 해소를 위한 관련 실국 TF팀 구성(5점)
- ▶ 연구과제 등 논리개발 : 규제합리화를 위한 객관적·과학적 논리개발(연구용역, 10점)
- ▶ 현장방문 등 규제실태조사 : 회당 2점
- ▶ 토론회·간담회 개최 : 회당 토론회 4점, 간담회·협의 등 2점
- ▶ 규제개선 홍보자료 : 수도권규제실태 홍보자료 작성(경기도규제지도) 매년 1회(회당 5점)
- ▶ 정부 및 국회 건의 : 분기별 1회 이상 (회당 3점)
- ▶ 제도개선 정책반영 : 새정부 규제개선정책 발표 또는 개정(주요건의 3건, 건별 5점)

□ 기대효과 (2조 642억원 투자, 5,398명 고용 예상)

- 자연보전권역 지정(84.7.11.) 前 기존공장의 증설 허용 시
  - 기존공장 32개소 투자 가능(예상금액 1조 1,957억원 / 고용예상 1,782명)
- 자연보전권역 계획입지 확대(6만㎡→30만~50만㎡) 및 연접개발제한 배제 시
  - 공장 38개소 투자 가능(예상금액 7,963억원 / 고용예상 1,879명)
- 특별대책지역 내 개별입지공장 집단화를 위한 산업단지 허용
  - 6개 산업단지(광주3, 이천3) 조성 가능(예상금액 722억원 / 고용예상 1,737명)

□ 문제점 및 대응방안

- 관계부처 협의 결과, 수도권 낙후지역의 과도한 입지규제의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지역별 갈등 심화
- 일자리창출 및 국토관리 차원(수질환경보전과 난개발방지)의 규제개선 패러다임 전환

□ 추진실적

- `16. 1.12. 「경기동북부 규제합리화 협업추진단(TF)」 구성 및 운영
- `16. 1.21. 「자연보전권역 산업입지규제합리화 관계기관 간담회」(국토부 등)
- `16. 2.4., 15. 자연보전권역 기업규제실태조사(2회) 및 현장간담회(국토부 등)
- `16. 2.16. 자연보전권역 규제합리화를 위한 대책(개별입지 관리방안) 실무협의
- `16. 3. 3. 「자연보전권역 산업입지규제합리화 방안 간담회」 개최(국토부 등)
- `16. 6.24. 「자연보전권역 환경보전과 산업입지 Win-Win 방안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배포, 방문설명 건의(7.13. 기재부·국토부·산업부·환경부 등)
- `16. 8. 8. 「경기도 규제지도」 제작 및 중앙정부 배포, 방문설명
- `16. 8.11. 자연보전권역 규제실태조사(기존공장) 및 국토부건의
- `16. 8.18., 22. 자연보전권역 규제합리화 방안 국회의원 건의(2회)
- `16. 9.22. 「자연보전권역 산업입지 규제합리화 관계기관 간담회」(특수협 등)
- `16.11.28. 「자연보전권역 국회의원 전담보좌관 정책간담회」 개최 및 건의
- `16.12. 1. 「국회규제개혁포럼(12.1. 창립)」 참석 및 정책연구발표, 건의
- `16.12.13.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정책토론회」 개최(비수도권·국조실 참석)
- `17. 3. 9. 자연보전권역 규제실태조사(기존공장 재조사) 및 국토부건의
- `17.3.13., 3.28. 「자연보전권역 기존공장 증설」 우선추진 건의 2회(국토부·기재부)
- `17.5.17., 26. 「수도권 산업입지정책 간담회(2회)」 및 정책건의(국토부, 도, 시·군)
- `17. 5.30. 「자연보전권역 산업입지 규제개선방안」 건의(국토부)
- `17. 5.31. 「자연보전권역 특대지역 7개 시·군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 `17. 6. 2. 일자리위원회 주관, 「지역 일자리책임관 일자리토론회」 정책건의
  - (안건) ①자연보전권역 기존공장 증설, ②자연보전권역 산업입지규제 합리화
- `17. 8.18. 자연보전권역 산업입지실태 현장조사(광주시)
- `17. 8.24. 「경기도 규제지도」제작 및 중앙정부·국회의원 등 배포, 방문설명
- `17.10.26. 「대통령 사·도지사 간담회」 경기동북부 수도권규제합리화 건의
- `17.11.30. 자연보전권역 산업입지 규제합리화 건의(국토부 방문)
- `17.12. 7. 자연보전권역 산업입지 규제합리화 건의(국토부 방문)
- `17.12.13. 「광역시·서울도」 형성과 수도권 규제 혁신」 토론회(도지사 주재)

## 99 범죄사각지대 CCTV 설치

제23조(예방 및 재난대책) ① 재난·재해와 범죄로부터 도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도민 친화적 예방안전시스템과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를 확립한다.  
3. 도내 취약지구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CPTED)사업을 추진하고, 취약지역 분석을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범죄사각지대 등에 CCTV를 설치함으로써 범죄예방 인프라를 구축한다.

|         |      |         |    |           |
|---------|------|---------|----|-----------|
| 기획재정위원회 | 시군연계 | 예산(본예산) | 계속 | 추진율 : 50% |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 3880    영상정보담당관 김경호 ☎ 3881    담당자 송재우 ☎ 8008-3891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 2018년(3년)
- 사업량 : 방법용 CCTV 1,114개소
- 총사업비 : 24,508백만원(도비 7,536백만원, 시군비 16,972백만원)
- 사업내용 : 외국인 밀집지역, 1인가구 밀집지역, 등산로·산책길 입구 등 범죄 발생 우려지역 및 어린이안전 CCTV 설치

☞ **소요 예산액 : 24,508백만원**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 구분 | 합계     | 기투자 | 2016  | 2017  | 2018  | 2019 | 비고 |
|----------------|----|--------|-----|-------|-------|-------|------|----|
| 범죄사각지대 CCTV 설치 | 계  | 24,508 |     | 6,592 | 9,850 | 8,066 |      |    |
|                | 국비 |        |     |       |       |       |      |    |
|                | 도비 | 7,536  |     | 2,161 | 2,955 | 2,420 |      |    |
|                | 시군 | 16,972 |     | 4,431 | 6,895 | 5,646 |      |    |
|                | 기타 |        |     |       |       |       |      |    |

### □ 추진상황

- 23개 시·군 방법용 CCTV 300개소 1,039대 설치(2016년)
- 31개 시·군 방법용 CCTV 448개소 1,553대 설치(2017년)

### □ 향후계획

- 시·군 방법용 CCTV 설치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 2018년 방법용 CCTV 366개소 추가 설치 추진

- 11 -

### □ 추진실적(성과)

- 방법용 CCTV 모니터링을 통한 범죄, 수배차량 등을 신고하여 범죄 예방 - '15년 4,632건 → '16년 5,403건 → '17년 6,103건 (632건 증, 전년 대비 12% 증)

| 구분    | 계      | 범죄     | 수배차량   | 청소년비위  | 재난재해 | 교통안전 등 안전 대응 |
|-------|--------|--------|--------|--------|------|--------------|
| 2015년 | 4,632건 | 1,922건 | 631건   | 1,272건 | 100건 | 707건         |
| 2016년 | 5,403건 | 2,060건 | 1,236건 | 908건   | 204건 | 995건         |
| 2017년 | 6,035건 | 2,527건 | 1,074건 | 672건   | 322건 | 1,508건       |

### ☞ 사업추진단계 및 추진율

| 사업추진단계   | 배정비율        | 2016       | 2017       | 2018년     |     |     |     | 2019년 |     | 당해년도 추진율  |
|----------|-------------|------------|------------|-----------|-----|-----|-----|-------|-----|-----------|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
| <b>계</b> |             | <b>100</b> | <b>100</b> | <b>50</b> |     |     |     |       |     | <b>50</b> |
| '16년     |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 | 50         | 50         |           |     |     |     |       |     |           |
|          | 사업추진 및 준공   | 50         | 50         |           |     |     |     |       |     |           |
| '17년     |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 | 50         | 50         |           |     |     |     |       |     |           |
|          | 사업추진 및 준공   | 50         | 50         |           |     |     |     |       |     |           |
| '18년     |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 | 50         |            | 50        |     |     |     |       |     | 50        |
|          | 사업추진 및 준공   | 50         |            |           |     |     |     |       |     |           |

#### <주요 사업단계별 목표>

- 단년도 계속 공사로 매년 배정비율을 100% 책정(계획수립, 준공으로 각 50% 할당)
- ※ 방법용 CCTV 설치 목표 : 922개소('16년 300개소, '17년 422개소, '18년 200개소)

### □ 기대효과

- 범죄 취약지역 방법용 CCTV 확충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
- 범인검거, 사건·사고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도민 생활 안전에 기여

- 12 -

## 162 환경정책 일원화 위한 직제개편

**제44조(직제개편)** 환경정책의 통합적인 추진체계 확립을 위하여 환경국 소관과 경제실 소관 업무를 일원화하고 필요시 직제를 개편한다.

|                  |      |                 |                |           |
|------------------|------|-----------------|----------------|-----------|
| 기획재정위원회          | 도 직접 | 비예산             | 신규             | 추진율 : 70% |
| 기획담당관 허승범 ☎ 2880 |      | 조직팀장 류호국 ☎ 4091 | 담당자 김재환 ☎ 4094 |           |

### □ 사업개요

- 환경정책 일원화 위한 소관부서 업무 조정(필요시 직제개편)
- 부서별 소관사무
  - (기후대기과) 온실가스 목표관리 총괄 조정
    - ※ 공공부문 온실가스 관리제 추진
  - (에너지과)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 **소요 예산액 : 비예산**

### □ 추진상황

- 업무조정에 대한 의견수렴 : 3회
  - (기후대기과) 비산업부문과 산업부문으로 기능 조정
    - ※ 이원화된 중앙부처(산자부, 환경부)의 법령 및 조직의 영향으로 중복사무 발생, 사업별 사무조정 필요
  - (에너지과) 중앙정부 기능에 따라 조정
- 기후에너지정책관(전문임기제) 행정안전부 협의 추진
  - 임용계획 수립(환경국) → 인사위원회 심의(인사과)

### □ 향후계획

- 기후에너지정책관 행안부 협의 지속 추진(도→ 행안부 자치분권과)

### □ 추진실적

- 환경행정 일원화 위한 부서별 사무조정 필요성 공감
- 기후변화 대응 정책기능 보좌 위한 기후에너지정책관 추진

- 13 -

### ☞ 사업추진단계 및 추진율

| 사업추진단계              | 배점 비율      | 2016      | 2017      | 2018 |     |     |     | 2019 |     | 총합 추진율    |
|---------------------|------------|-----------|-----------|------|-----|-----|-----|------|-----|-----------|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
| <b>계</b>            | <b>100</b> | <b>20</b> | <b>50</b> |      |     |     |     |      |     | <b>70</b> |
| 부서별 의견수렴            | 50         | 20        | 30        |      |     |     |     |      |     | 50        |
| 조직운영개선협의체           | 10         |           | 10        |      |     |     |     |      |     | 10        |
| 기후에너지정책관 추진         | 10         |           | 10        |      |     |     |     |      |     | 10        |
|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 | 30         |           |           |      |     |     |     |      |     |           |

### <주요 사업단계별 목표>

- ▶ 부서별 의견수렴 3회 실시(최초 20점, 2·3회 각 15점 배정)
- ▶ 조직운영개선협의체 운영 10점, 기후에너지정책관 추진 10점 배정

### □ 기대효과

- 환경정책 통합 추진체계 확립으로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및 도정 효율성 제고

### □ 문제점 및 대응방안

-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여러 부서에서 추진 중 [국무조정실(녹색성장지원단),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 14개시도(경기도 등) : 기후변화 대응(환경부서), 에너지(경제 관련부서)
- 3개시도(서울, 강원, 충남) : 기후 및 에너지를 동일부서에서 추진

- 중앙정부와의 업무협력 강화 및 행정체계 일원화 위해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 필요

## 196 경기도 인구정책 조정회의 구성

제54조(복지격차해소) 31개 시군간 보건복지 격차해소 및 보건복지 균형발전을 위해 시군의 특성을 감안한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추진한다.

2. '경기도 인구정책 조정회의'를 구성·운영하여 인구포럼 및 인구변화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한다.

| 기획재정위원회 | 도 직접 | 예산 | 계속 | 추진율 : 100% |
|---------|------|----|----|------------|
|---------|------|----|----|------------|

|                   |                      |               |
|-------------------|----------------------|---------------|
| 미래전략담당관 김규식 ☎2490 | 인구정책현안TF팀장 박동렬 ☎2924 | 담당자 정대식 ☎4147 |
|-------------------|----------------------|---------------|

### □ 사업개요

○ 인구변화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일자리, 주거 등 여러 분야에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경기도 인구정책조정회의' 신설·운영

☞ **소요 예산액 : 100백만원(도비)**

### □ 추진상황

○ 전국 최초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경기도 인구정책조정회의」 출범(3.28.)

- 총 21명(위원장 : 행정1부지사 / 관련 실·국장 및 민간전문가)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조례를 개정(3.13.)하고,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 조정회의를 설치, 저출산·고령화에 응·복합적으로 선제적 대응

- 기존의 복지 정책을 넘어서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정책을 융합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기능 강화

○ 인구변화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 마련

- 인구정책 5개년계획 수립

▶ 경기도 여건에 맞는 중장기 인구정책 비전을 마련하고 실국별 인구정책 수립으로 도정 전반에 걸친 인구정책 마스터플랜 마련

▶ 10월 연구기관 선정 및 착수완료, '18년 4월 최종 결과보고 예정

- 인구영향평가 설계 : 17개 시·도 중 최초

▶ 인구관점의 정책타당성 평가 및 미래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사전 인구영향평가 모델 개발 및 법제화 추진

▶ 10월 연구기관 선정 및 착수완료, '18년 4월 최종 결과보고 예정

- 인구정책 평가지표 개발 : 전국최초

▶ 도 전체 사업에 대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흐름에 따른 평가지표 개발

- 15 -

- 일자리·저출산 SIB (Social Impact bond :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여성 고용을 유지를 목표로 일자리·저출산 SIB 사업모델 설계 및 중간운영기관 선정 예정

○ 인구포럼

- 북포럼 '정해진 미래' 개최

▶ (時/所) '17.5.29.(월) / 상황실 / <조영태 교수, 배수문 의원 등 참석>

▶ (내용) 국내 인문학 권위자 조영태 교수의 저서 '정해진 미래'를 같이 읽고 경기도 인구정책 방향 논의

- 워킹맘 육아대디 토크콘서트 개최

▶ (時/所) '17.7.10.(월) / 스타트업캠퍼스 / <행정1부지사 등 참석>

▶ (내용) 행정1부지사와 워킹맘, 육아대디, 전문가 등이 패널로 참석, 현실적인 육아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정책 방안 등을 함께 모색

- 일자리·저출산 SIB 토론회 개최

▶ (時/所) '17.7.27.(목) 14:00~16:10 /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 (참석) 연정부지사, 양근서·배수문·공영애 도의원, 조영태 서울대 교수 등

▶ (내용) 여성의 일·살 균형, 남성의 참여를 민간투자자로 유도하는 경기도형 SIB 사업 추진 방향 등 논의

- 경기도 인구정책 국제 심포지엄 개최

▶ (時/所) '17.11.3.(금) 13:00~17:40 / 노보텔 엠버서더 수원

▶ (참석) 오가와 나오히로(동경대 교수), 줄리앙 데후프(주한프랑스부대사), 가사기 요시타카(나기초장) 등

▶ (내용)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최초로 추진한 인구정책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미래 인구아젠다에 대한 이슈 선점

### □ 주요성과

○ 경기도 '인구정책분야' 대통령상 수상('17.11.30)

○ SIB 아이디어 공모대회 우수상 수상

### □ 향후 계획

○ 도의회, 실국, 시·군과의 소통을 통한 정책수립 연계 강화로 인구정책 아젠다 도정 반영

- 16 -

## 212 공공와이파이(WiFi) 서비스 제공

제58조(통신복지) 도민의 데이터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등 통신복지 실현을 위한 대책을 마련·추진한다.

1. 데이터 통신서비스를 현대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공공재로 인식하고,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대한 정보격차해소를 중심으로 재난 및 치안관리, 응급상황 신속대처, 맞춤형 행정정보 서비스 등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획재정위원회 | 시군 보조 | 예산 | 신규 | 추진율 : 82%

담당과장 김승호 ☎ 3880, 담당팀장 김명훈 ☎ 3890, 담당자 홍종욱 ☎ 3893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7년 ~ '18년
- 사업량 : 11개 시군 105개소
- 총사업비 : 1,375백만원 (도 515.5, 시군 859.5)
- 사업내용 : 공공와이파이 인프라 구축(무선용 모듈<sup>1)</sup>AP, 부대장비 등 설치)

☞ 소요 예산액 : 515.5백만원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 구분 | 합계    | 기투자 | 2016 | 2017  | 2018 | 2019 | 비고 |
|--------------------|----|-------|-----|------|-------|------|------|----|
| 공공무선인터넷<br>구축 시범사업 | 계  | 1,375 | 0   | 0    | 515   | 860  |      |    |
|                    | 국비 | 0     |     |      | 0     |      |      |    |
|                    | 도비 | 515.5 |     |      | 257.5 | 258  |      |    |
|                    | 시군 | 859.5 |     |      | 257.5 | 602  |      |    |

### □ 추진상황

- 대상지 선정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17. 1월
- 공공무선인터넷 구축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 '17. 2월
- 도비 보조금 교부(1회 추경) 및 시별 사업 추진 : '17. 6월~

1) AP(Access Point) WiFi 신호를 송·수신 해주는 장비

### □ 향후계획

- 2017년도 이월사업 추진(수원시) : '18. 2월
- 2018년도 사업 추진(8개 시군) : '18. 3월

### □ 추진실적(성과)

- 도비 보조금 교부 및 시(시) 추경 확보 : '17. 6월 ~ 9월
- 공공무선인터넷 인프라 설치(3개 시) 완료 : '17. 10월 ~ 12월
- ※ 수원시 : '18년도 사업 추진 ('17년 추경 일정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

☞ 사업추진단계 및 추진율

| 사업추진단계             | 배정<br>비율   | 2016 | 2017      | 2018      |     |     |     | 2019 |     | 총합<br>추진율 |
|--------------------|------------|------|-----------|-----------|-----|-----|-----|------|-----|-----------|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
| <b>계</b>           | <b>100</b> |      | <b>50</b> | <b>32</b> |     |     |     |      |     | <b>82</b> |
| 사업 대상 선정 및<br>현장실사 | 10         |      | 10        |           |     |     |     |      |     | 10        |
| 계획수립 및 통보          | 20         |      | 20        |           |     |     |     |      |     | 20        |
| 예산확보 및 내시          | 10         |      | 10        |           |     |     |     |      |     | 10        |
| 시군 예산편성            | 20         |      | 10        | 5         |     |     |     |      |     | 15        |
| 사업추진               | 30         |      |           | 22        |     |     |     |      |     | 22        |
| 추진상황 점검            | 10         |      |           | 5         |     |     |     |      |     | 5         |

#### <주요 사업단계별 목표>

- ▶ 사업대상 선정 및 현장실사 : 시군별 대상지의 현장실사(50%이상 10점 / 미만 5점)
- ▶ 예산확보 및 내시 : 도비 예산확보(7점), 내시(3점)
- ▶ 시군 예산편성 : 시군별 예산 편성비율에 따라 배점(편성 시군수/시군수\*20)
- ▶ 사업추진 : 시군별 사업 준공 비율(준공 시군수/시군수\*30) \*단, '17년 사업은 20점 기준으로 작성

### □ 기대효과

- 취약계층 등 도민에게 통신비 부담경감과 정보격차 해소
- 복지혜택 및 응급상황 대처 등 도정 정보에 대한 모바일 접근성 향상

## 213 공공데이터 민간 개방, 데이터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제58조(통신복지) 도민의 데이터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등 통신복지 실현을 위한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2. 빅데이터 오픈플랫폼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과학적 도정을 구현하는데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기획재정위원회    도 직접    예산    신규/계속    추진율 : 91%

빅데이터담당관 박종서 ☎4150,    빅데이터기획팀장 서정환 ☎3951,    담당자 김주연 ☎3952  
 데이터개발팀장 한시환 ☎2901,    담당자 박지일 ☎2819  
 데이터활용팀장 김중연 ☎3831,    담당자 정용수 ☎3832

### □ 사업개요

-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道가 보유한 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 데이터와의 융합활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지원
- 과학적 도정 구현과 도민 편의 향상을 위해 빅데이터를 도정에 적용하고 우수 모델 확산

☞ **소요 예산액 : 25,093백만원**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 구분 | 합계     | 기투자   | 2016  | 2017  | 2018  | 2019  | 비고 |
|----------|----|--------|-------|-------|-------|-------|-------|----|
| 빅파이 프로젝트 | 도비 | 25,093 | 5,546 | 4,889 | 5,227 | 3,355 | 5,000 |    |

### □ 추진상황

#### ○ (2014년) 사업 전담 조직 설치, 기본계획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 전담조직 : 道 빅데이터담당관, 경기콘텐츠진흥원 빅파이추진단

#### ○ (2015년) 조례 제정 및 빅파이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통한 기틀 마련

-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전국 최초)
-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 경기콘텐츠진흥원 內 빅파이추진단(전담 실행조직) 개소
- 빅데이터 분석사업 (11건), 전문인력 양성(262명), 빅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
- 빅데이터 국제 포럼 “빅포럼” (주제 : 빅데이터 거버넌스, 개인정보보호, 과학적 행정 구현)
- 道 공공데이터 개방포털 구축(도·시군·산하기관 보유 공공데이터 408종 개방)

- 19 -

#### ○ (2016년) 타기관 협업을 통한 빅파이센터(스타트업캠퍼스) 개소

- 데이터 공유활용을 위한 오픈 플랫폼 “빅파이센터” 개소(한국정보화진흥원 협업)
- 빅파이센터 內 통계청 Data 이용센터 입주
- 빅데이터 분석 사업 (7건), 전문인력 양성(213명)
- 데이터기반 민간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9개 팀), 빅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
- 빅데이터 국제 포럼 “빅포럼” (주제 : 자율주행 혁명과 미래형 스마트시티)
- 道 보유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당초 계획대비 1년 앞당겨 1,038종 개방)
- ※ 2016 휴먼테크놀로지어워드/사회공공부문 최우수상(16.6. / 주관 : 한겨레신문)

#### ○ (2017년)

- 고품질 공공데이터 발굴·개방 및 데이터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한 기능강화
- ※ (제공기관 확대)공공데이터 조례 일부개정(16.12.16./이현호 의원 발의)  
 → 장애인복지, IoT데이터 등 400여종 추가 발굴 총 1,400여종 개방
- ※ (데이터 이용편의)위치기반 데이터 찾기, 과거데이터 보기, 데이터 시각화 등
- 빅데이터 분석사업 (11건), 전문인력양성(328명)
- 데이터기반 민간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11개 팀), 빅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
- 빅데이터 국제 포럼 “빅포럼” (주제 :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의 진화)

### □ 향후계획

#### ○ 행정과 데이터의 융합을 통한 데이터 기반 행정 지원

- 도정 활용도가 높고, 시군의 정책적 확산 효과가 높은 과제에 대한 지속 발굴 및 확산
- 도정 활용 효과가 입증된 빅데이터 분석모델의 계속 지원

#### ○ 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

- 데이터 기반 민간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사업화지원
- 기업이 필요로 하는 빅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
- 민간이 필요로 하는 고수요·고가치 맞춤형 데이터 발굴 및 품질개선

### □ 추진성과

#### ○ 빅데이터 공유활용 기반 구축 및 생태계 조성 지원

- 빅파이센터 개소(16.3) 및 민간 통신사카드사 데이터 지원
- 기업 현장 활용이 가능한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803명)

- 20 -

- 데이터 기반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20팀)-총 39억 투자유치

○ 과학적 도정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사업 추진

- 효과가 입증된 분석모델 확산 및 도입효과가 높은 신규 분석과제 발굴분석(29건)
  - ※ 공공분야 빅데이터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16.11.10/주관:행정자치부)
  - ※ 행정안전부 선정, 표준분석 모델 지정(3건)

○ 공공데이터 개방 및 민간활용 기반 마련

- 고수요·고품질 공공데이터 1,400여종 개방(400여종 추가 발굴)
  - ※ (공공데이터 개방현황) 408종('15)→ 1,038종('16)→ 1,400여종('17)
  - ※ (공공데이터 제공기관 확대) 도·시군·공사('16)→ 기존+출자·출연기관('17)
  - ※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9월) 및 웹 접근성 품질인증(10월) 획득
- 2017 데이터 거래·중개 선도 시범사업 참여(한국정보보호진흥원)
  - ※ (목적) 공공·민간 융합데이터 발굴·개방·유통 생태계 지원

○ 빅데이터 활용문화 확산을 위한 빅포럼 등 행사개최

- ICT 분야 글로벌 스탠더드 구축을 위한 빅포럼 개최('15.10월, '16.10월, '17.9월 판교)
- 데이터활용 우수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3회)

☞ 사업추진단계 및 추진율

| 사업추진단계            | 배점 비율 | 2016 | 2017 | 2018 |     |     |     | 2019 |     | 당해연도 추진율 |
|-------------------|-------|------|------|------|-----|-----|-----|------|-----|----------|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
| 계                 | 100   | 100  | 100  | 20   |     |     |     |      |     | 20       |
| 빅데이터 분석사업         | 20    | 20   | 20   | 5    |     |     |     |      |     | 5        |
| 공공데이터개방포털 구축 및 운영 | 20    | 20   | 20   | 5    |     |     |     |      |     | 5        |
| 전문인력 양성           | 20    | 20   | 20   | 5    |     |     |     |      |     | 5        |
| 민간비즈니스 모델 양성      | 20    | 20   | 20   | 5    |     |     |     |      |     | 5        |
| 빅포럼 등 문화확산        | 20    | 20   | 20   | 종료   |     |     |     |      |     | 종료       |

□ 기대효과

-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도정 구현과 도민 생활 편의 향상
- 빅데이터 기반의 산업 생태계 조성과 빅데이터 활용 문화 확산을 통해 도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로 도약

|   |                           |
|---|---------------------------|
| <b>264</b>  | <b>경기도 부지사 사무분장 규칙 개정</b> |
| 제71조(연정부지사) ① 더불어민주당은 상생과 협력의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해 연정부지사를 추천하여 경기도지사와 함께 도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br>3. 연정부지사의 업무 범위와 역할은 양당이 합의한 별첨 「경기도 부지사 사무분장 규칙」 개정사항에 의한다. |                           |
| 기획재정위원회   | 도 직접                      |
| 비예산   | 신규                        |
| 추진율 : 100%  |                           |
| 기획담당관 허승범 ☎ 2880 조직팀장 류호국 ☎ 4091 담당자 김재환 ☎ 4094   |                           |

□ 사업개요

- 연정부지사의 업무 범위를 도정 주요 정책의 기획 및 수립 시 정무적 업무, 대외협력, 연정 사업과제 총괄 역할 수행으로 개정

(기존) 보건복지국·환경국·여성가족국 등 3개 국 관할 행정적 역할 지중

(개선) 연정합의문의 사업과제 집행, 도·도의회 갈등 해결 등 정무적 역할

- (관할실국) 전체 실국 업무에 관여(특정 실국 업무에 국한되지 않음)
- (직속기구)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 대외협력과, 공유시장경제국(공유경제과, 따복공동체지원과)
  - ※ 조직편제 취지 : 연정가치 확산 및 원활한 대외 소통과 정무기능 수행

☞ 소요 예산액 : 비예산

□ 추진상황

- 연정부지사 사무권한 및 사무분장 개정을 위한 부지사 사무분장 규칙 개정
  - 도지사를 보좌,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그 밖의 정무적 업무 수행
  - 연정실행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 향후계획 : 사업완료

□ 추진실적

- 「경기도 부지사 사무분장 규칙」 개정 : '16.9.30. '16.11.1.

□ 기대효과

- 연정부지사의 사무분장 개정으로 연정실행과제 추진 동력 확보
- 연정협력국 소관 사무의 총괄기능 강화 및 대(對) 국회·대(對)의회, 정당 등과의 협력기능 강화

**265** 연정부지사 평가 기회 마련

제71조(연정부지사) ② 연정부지사가 부지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회를 마련**한다.

|   |          |     |    |          |
|---|----------|-----|----|----------|
| 기획재정위원회   | 도 직접(위탁) | 비예산 | 신규 | 추진율 : 25 |
| <small>기획담당관 허승범 ☎ 2880, 정책조정팀장 홍성덕 ☎ 2810 담당자 명유신 ☎8008-5272</small> |          |     |    |          |

- **추진방향**
  - 연정부지사(舊 사회통합부지사) 제도 시행이 연정의 과정에 미친 영향과 역할 등 제도적 관점에서 평가

- **사업개요**
  - 평가기간 : '18. 1월 ~ 3월
  - 평가내용 : 기능과 권한 등 제도적 관점
    - 연정부지사 제도 도입의 의의와 도정발전에 기여한 역할 평가
    - 현상절차 등 연정의 형성과정, 연정실행위원회재정전략회의 등 연정협 의체 및 연정협력국 등 연정시스템 전반에 대한 평가
  - 주 관 : 경기연구원 ※ 별도의 전문 연구팀 구성

- **추진상황**
  - 경기연정 모니터링 평가 추진계획 변경('18.2.7)
  - 경기연구원 단기정책과제 사전협의('18.2.7~)

- **향후계획**
  - 정책연구과제 시행 : '18.2월~3월
  - 결과보고서 작성 : '18.4월 \* 지방선거 종료 후 결과 공개

☞ **사업추진단계 및 추진율**

| 사업추진단계 | 배정 비율 | 2016 | 2017 | 2018 |     |     |     | 2019 |     | 종합 추진율 |
|--------|-------|------|------|------|-----|-----|-----|------|-----|--------|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
| 계      | 100   |      |      | 25   |     |     |     |      |     | 25     |
| 기본계획수립 | 25    |      |      | 25   |     |     |     |      |     | 25     |
| 착수보고   | 25    |      |      |      |     |     |     |      |     |        |
| 중간보고   | 25    |      |      |      |     |     |     |      |     |        |
| 최종보고   | 25    |      |      |      |     |     |     |      |     |        |

- **기대효과** : 대한민국 정치역사상 최초로 시행한 경기연정에 대한 의미와 추진과정을 기록하고 평가함으로써 '한국형 연정 시행'의 제도적 기틀 마련

**266**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제72조(공공기관 경영합리화) ① 도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하여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혁신적인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한다. 또한 **공공기관 통폐합을 위해 기관별 용역을 실시**하고, 통합관리를 위해 **'공공기관 통폐합 관리 위원회'**를 둔다.

|   |      |           |    |           |
|---|------|-----------|----|-----------|
| 기획재정위원회   | 도 직접 | 비예산(제도개선) | 계속 | 추진율 : 70% |
| <small>평가담당관 고광춘 ☎ 2450 공기업팀장 임정원 ☎ 4990 담당자 조현석 ☎ 2402</small> |      |           |    |           |

- **사업개요**
  - 기본방향 : 공공기관 자체 경영합리화<sup>2)</sup> 중점 추진
    - '16년 경영합리화 용역안 및 공공기관별 자체 경영합리화 방안 검토 후, → 개선이 필요한 기관 선정, 심층진단 등을 통해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 추진협의회, 소관 실국, 공공기관 등 연계로 실행력·수용성 담보

< 제2차 연정실행위원회 논의사항('17.3.17) >

- 통폐합은 경영합리화의 하나의 방안일 뿐이므로, 통폐합을 전제로 하는 경영합리화 추진 지양
- 공공기관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기관구성원이 수용할 수 있는 경영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소요 예산액 : 비예산**

- **추진상황**
  - ('17.3.17) 2기 경영합리화 방향 및 추진협의회 구성(2차 연정실행위)
  - ('17.4~9월) 총 7차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 개최
    - 용역안 검토, 기관 자체 경영합리화 방안보고, 의견수렴, 심층토론 등
  - ('17.9.5) 14개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 마련(제7차 추진협의회)
  - 심층진단 필요(3개), 조직진단 필요(2개), 기타 경영합리화 추진(9개)
  - ('17.10.23)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 보고(6차 연정실행위)
  - ('17.11.14) 경영합리화 방안 전파(공공기관·소관 실국)

2) 내부 경영합리화 : 사업구조, 조직 및 인력구조 등 기관 내부 시스템을 개편하여 기능개선 및 효율을 도모하는 구조개혁 작업으로 경영합리화 방안의 일환

□ **향후계획**

- 기관별 심층진단 등 추진계획 수립 : ~18.2월
- 경영합리화 이행실적 보고회 : '18.4월(제8차 추진협의회)

□ **추진실적(성과)**

| 17기 경영합리화('15~16년)   | 27기 경영합리화('17~18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 통폐합 등(통폐합 4, 시 이관 1)</li> <li>- 중기센터 + 과학기술진흥원 → 경제과학진흥원</li> <li>- 평생교육진흥원 + 영어마을 → 평생교육진흥원</li> <li>-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 수원시 이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개 기관 자체 경영합리화 방안 마련</li> <li>- 심층진단 필요(3개), 조직진단 필요(2개), 기타 경영합리화 추진(9개)</li> <li>○ 공공기관 규정정비</li> <li>- 인사노무분야 등 211개 조항 정비</li> </ul> |

☞ **사업추진단계 및 추진율**

| 사업추진단계                   | 배점 비율      | 2016 | 2017      | 2018 |     |     |     | 2019 |     | 종합 추진율    |
|--------------------------|------------|------|-----------|------|-----|-----|-----|------|-----|-----------|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
| <b>계</b>                 | <b>100</b> |      | <b>70</b> |      |     |     |     |      |     | <b>70</b> |
| 기본운영방향 수립                | 10         |      | 10        |      |     |     |     |      |     | 10        |
| 27기 추진협의회 구성             | 10         |      | 10        |      |     |     |     |      |     | 10        |
| '16년 용역안 검토              | 10         |      | <b>10</b> |      |     |     |     |      |     | 10        |
| 14개 공공기관 자체 경영합리화 방안 보고  | 20         |      | 20        |      |     |     |     |      |     | 20        |
| 심층진단 대상 선정 등 경영합리화 방안 마련 | 20         |      | 20        |      |     |     |     |      |     | 20        |
| 기관별 자체 경영합리화 추진          | 30         |      |           |      |     |     |     |      |     |           |

□ **기대효과**

-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를 통해 도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하여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 제고

**참고**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17.9.5, 7차 추진협의회)**

□ **심층진단 필요(3개 기관)**

- 대상 : 평택항만공사,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 방향 : 기관 존치 타당성 검토 및 설립취지에 맞는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 인력 개편 및 장기적 발전계획 마련 필요

□ **조직진단 필요(2개 기관)**

- 대상 :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의료원
- 방향 : 조직·인력 등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하여 인력과 업무량 불균형 해소 및 기관 운영의 공공성·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 **기타 경영합리화 추진(9개 기관)**

- 대상 : 경기연구원, 가족여성연구원, 복지재단, 문화의전당, 콘텐츠진흥원, 농식품유통진흥원, 청소년수련원, 도시공사, 관광공사
- 방향
  - 설립취지 충실 이행 및 광역기능 강화 방안 등 마련
  - 조직·인력·성과평가·재무구조 개편 등 기관운영의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을 통한 광역 기능 강화 등

**268 사무위탁 시 도의회 의결, 조례 및 법령 개정**

제73조(사무위탁 요건강화) 경기도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할 경우,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및 「지방자치법」 제151조의 개정 건의를 협력 추진한다.

|   |      |     |    |            |
|---|------|-----|----|------------|
| 기획재정위원회   | 도 직접 | 비예산 | 신규 | 추진율 : 100% |
| 기획담당관 허승범 ☎ 2880    조직팀장 류호국 ☎ 4091    담당자 광성덕 ☎ 2651 |      |     |    |            |

□ **사업개요**

-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
  - ‘민간위탁’과 ‘사무위임’ 등 자치사무는 도의회 동의를 받고, 국가사무는 중앙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다른 행정기관 ‘위탁’은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조례 내용 개정
    - ※ 국가위임사무 위탁은 민간위탁과 동일하게 중앙기관 승인

☞ **소요 예산액 : 비예산**

□ **추진상황**

-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으로 행정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 마련
  - ※ 조례 개정으로 위탁사무 의회동의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법률 개정 불필요

□ **향후계획 : 사업완료**

□ **추진실적**

-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 : '17. 3. 13.

□ **기대효과**

- 타 행정기관 사무위탁 시 검증절차 강화 및 의회협력, 연정기능 강화

**269 책임부단체장 도입 관련 법령 개정**

제74조(책임부단체장) 경기도 인구나 조직 규모에 맞게 부단체장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사무분장을 조례로 위임하는 ‘책임부단체장제도’ 도입과 도의원의 부단체장 겸직을 허용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한다.

|   |      |     |    |           |
|---|------|-----|----|-----------|
| 기획재정위원회   | 도 직접 | 비예산 | 계속 | 추진율 : 70% |
| 기획담당관 허승범 ☎ 2880    조직팀장 류호국 ☎ 4091    담당자 김재환 ☎ 4094 |      |     |    |           |

□ **사업개요**

- 광역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道의 부지사 정수는 「지방자치법」(제110조)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어 자의적 정수확대 불가
- 전문분야에 부단체장을 임명하여 업무성과를 높이는 “책임부지사”제도 도입 및 사·도의원 소통·협력을 위한 부단체장 겸직을 허용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 **추진상황 : 법령개정 건의**

- 인구 200만 이상 시·도의 부단체장 정수 증원(3명→5명)
- 시·도의원의 부단체장 겸직 허용(법 제35조에 단서규정 신설)

□ **향후계획 : 법령개정 등 중앙 지속 건의**

□ **추진실적 : 법령개정 관련 건의 : 5회**

- 도의원 겸직허용 등 건의 :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16.10.5.'17.10.19.)
- 책임부지사 도입 등 건의 : 행정자치부 조직담당관 회의('16.10.18.)
  - ※ 국가발전전략과제(17년2월), 국가기획자문위원회(17년5월)에 추가 건의

☞ **사업추진단계 및 추진율**

| 사업추진단계   | 배정 비율 | 2016 | 2017 | 2018 |     |     |     | 2019 |     | 종합 추진율 |
|----------|-------|------|------|------|-----|-----|-----|------|-----|--------|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
| 계        | 100   |      |      |      |     |     |     |      |     | 70     |
| 법령개정 건의  | 70    | 25   | 45   |      |     |     |     |      |     | 70     |
| 지방자치법 개정 | 30    |      |      |      |     |     |     |      |     | 0      |

□ **기대효과**

- 급증하는 광역행정 수요 대응 및 전문분야에 ‘책임부지사’를 임용하여 전문적·능동적 행정서비스 제공

## 270 연정예산 최우선 순위 편성

제75조(연정예산) ① 도지사는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시 연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

|   |      |     |    |            |
|---|------|-----|----|------------|
| 기획재정위원회   | 도 직접 | 비예산 | 계속 | 추진율 : 100% |
| 예산담당관 전하식 ☎ 2120 주민참여예산팀장 정재진 ☎ 2844 담당자 한성희 ☎ 2128 |      |     |    |            |

### □ 사업개요

- 연정합의 과제의 충실한 이행 및 성과 창출 위한 자원 배분
  - 288개 연정 사업 추진의 실효성 제고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연정 성과 창출로 도민 복리 증진

☞ **소요 예산액 : 비예산**

### □ 추진상황

| 연정협력국                                     | 실·국  | 예산담당관  |
|---|--|--|
| - 연정사업계획 및 연차별 로드맵 확정<br>- 연정사업 추진상황 종합관리 | ↔ - 연정사업에 대한 법적타당성, 도정과의 연계성, 이행가능성 검토<br>- 사전이행절차 이행 및 연정위원장 보고 후 예산 요구 | ↔ - 연도별 연정사업 필요 자원 확보 계획 수립<br>- 실·국 요구사업 타당성 검토<br>- 실행시기 조정 등을 통해 연정예산 최우선 순위 편성 |

### □ 향후계획

- 2018년 본예산 연정예산 편성 결과 보고 (연정실행위)

### □ 추진실적

- 연정예산 반영 현황(누계)

(단위 : 백만원)

| 연 도   | 당 초       | 최 종       | 비 고                             |
|-------|-----------|-----------|---------------------------------|
| 2016년 | 694,514   | 907,329   | 1기 연정(32개 과제)<br>2기 연정(288개 과제) |
| 2017년 | 1,560,980 | 1,782,606 |                                 |
| 2018년 | 1,666,208 | -         |                                 |

## 271 특별조정교부금 연정부지사 보고

제75조(연정예산) ② 예산부서는 매 회계연도 전체 특별조정교부금을 연정부지사에 보고 후 적법한 집행기준과 결재 등 절차 참여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사업에 공정하게 집행한다.

|   |      |     |    |            |
|---|------|-----|----|------------|
| 기획재정위원회   | 도 직접 | 비예산 | 계속 | 추진율 : 100% |
| 예산담당관 전하식 ☎ 2120 문화환경예산팀장 임보미 ☎ 2839 담당자 이수호 ☎ 2841 |      |     |    |            |

### □ 사업개요

- (근거) :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9조의3,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 (목적)
    -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광역사업, 재해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 반영
    - 일반조정교부금 산정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획일성을 보완하여 시·군간 재정형평화의 기능 제고 및 조정교부금제도 타당성 확보
  - (배분방향)
    - 지역주민,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 수혜제고 사업
    - 시·군 및 광역행정 차원 지역개발 사업
    -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 도세 징수 우수 시군
    - 재정형평화 차원 및 그밖의 특별재정 수요
- ※ 민간지원 보조사업, 지역주민 반대여론 사업 배제

### □ 추진상황

-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계획 연정부지사 결재
  - 2016년 : 10.19./11.4./12.7./12.23. (4회)
  - 2017년 : 1.24./1.26./4.7./5.31./6.14./8.1./8.29./9.21./10.17./11.8./12.1./12.22. (12회)
- '17,'18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안) 연정부지사 결재

### □ 향후계획

- '18.2월~,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 결재

## 272 실국별 예산한도 재조정 및 분야별 전국 평균수준 추진

제76조(재정운용) 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실국별 예산한도(실링)를 재조정한다. 특히 해당 분야의 예산 한도가 분야별 전국 평균 이하인 실·국(문화, 경제, 주거복지 등의 경우 단계적으로 전국 평균 수준으로 맞추도록 추진한다.

|                 |                  |     |               |            |
|-----------------|------------------|-----|---------------|------------|
| 기획재정위원회         | 도 직접             | 비예산 | 신규            | 추진율 : 100% |
| 예산담당관 전하식 ☎2120 | 예산총괄팀장 이계연 ☎2832 |     | 담당자 박광성 ☎2843 |            |

### □ 사업개요

- 예산편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년 예산편성전 실국 예산실링 배분

### □ 추진상황

- ('17. 7.24) 가용재원 추계액 범위 내 '18년 실국별 투자사업 총액 배분

|                               |   |                               |   |                                |
|-------------------------------|---|-------------------------------|---|--------------------------------|
| '16년 투자사업<br>실링배분액<br>7,321억원 | ⇒ | '17년 투자사업<br>실링배분액<br>8,500억원 | ⇒ | '18년 투자사업<br>실링배분액<br>11,811억원 |
|-------------------------------|---|-------------------------------|---|--------------------------------|

- ('16년~현재) 예산배분액 비율이 낮은 분야에 대한 개선 추진

(단위 : 억원,%)

| 구분           | 2018년  |      | 2017년 |      | 2016년 |      |
|--------------|--------|------|-------|------|-------|------|
|              | 배분액    | 비율   | 배분액   | 비율   | 배분액   | 비율   |
| 전체 투자사업      | 11,811 | 100  | 8,500 | 100  | 7,321 | 100  |
| 경제-문화-농업분야   | 4,634  | 39.2 | 3,459 | 40.6 | 2,368 | 32.3 |
| 경제실, 공유시장경제국 | 1,893  | 16.0 | 1,338 | 15.7 | 879   | 12.0 |
| 문화체육관광국      | 1,702  | 14.4 | 1,505 | 17.7 | 868   | 11.9 |
| 농림축산식품부      | 1,039  | 8.8  | 616   | 7.2  | 621   | 8.5  |

#### 《 도 재정구조 특징 》

- 우리 도는 세입구조상 자체수입 비중(도55%;他道28%)이 높아 **법정경비 부담이 큼**
  - 교육재정교부금 : 타 도(3.6%), 경기(5%, 4,257억)
  - 지방소비세 중 상생기금 출연 : 타 도(0%), 경기(35%, 2,074억)
  - 지방교육세 1조 9,430억('17년 대비 2,206억↑), 조정교부금 3조 2,268억('17년 대비 2,206억↑)

- ⇒ **균형적인 재원배분에 대한 합의도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배분 추진**
  - 실국에서 국비확보와 자체사업 발굴시 적극 지원할 계획

### □ 향후계획

- '18년 본예산 실국별 투자재원 배분대비 편성액 결과 분석

## 274 지역발전특별회계 등 도비 지원기준 재정립

제76조(재정운용) ③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31개 시·군에 대한 국·도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확정시, 당초 지원 결정된 도비지원액으로 지원토록 추진하며 도비지원 기준비를 변경 전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당초 확정액으로 지원토록 추진한다. 또한 시·군에 대한 도비지원 기준비를 결정시 31개 시·군의 의견을 반영한다.

|                  |                   |             |                |            |
|------------------|-------------------|-------------|----------------|------------|
| 기획재정위원회          | 도 직접              | 비예산(제도 재정립) | 계속             | 추진율 : 100% |
| 예산담당관 전하식 ☎ 2120 | 예산총괄팀장 이계연 ☎ 2832 |             | 담당자 고태욱 ☎ 2833 |            |

### □ 사업개요

- (근거) 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1조, 22조), 시행규칙(제3조, 4조)
- (원칙) 신규·확대(30% 이상 증액)·일몰 도비보조사업 시군 사전협의
  - ※ 기타 현안 및 쟁점사항(복지사업 보조율 조정, 차등보조 등)은 사안별 추가 협의
- (주체) 도(예산담당관) ↔ 시군 재정발전협의회
- (절차) 실국↔시군 사전협의 ⇒ 예산담당관 협의결과 정리 ⇒ 협의회와 일괄 협의
- (방법) 1차(서면협의-논의안건 확정 및 의견수렴) + 2차(대면협의)

### □ 추진상황

- ('17. 1.24) '17년 도-시군 제1차 재정발전협의회 개최
  - 보육사업 공동대응, 협의회 정례화, 차등보조율 조정 등 논의
- ('17. 6.27) 도-의회-시군 협력적 예산연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차등보조구간 개선, 신규·일몰 사전협의, 연정 도 역할 등 논의
- ('17. 7.14) '17년 도-시군 제2차 재정발전협의회 개최
  - 신규·확대·일몰 사전협의, 복지사업 보조, 차등보조율 개선 등 논의
- ('17. 9.25) '17년 도-시군 제3차 재정발전협의회 개최
  - '18년도 신규·확대·일몰사업 협의, 도-시군 공동대응 복지사업 협의

### □ 향후계획

- 2018년도 재정발전협의회 운영계획 수립 : 2018. 2월 중

## 275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검토

제76조(재정운용) ④ 대규모 재정투자의 건전성·효용성 제고를 위해 예비타당성 및 투융자 심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평가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을 검토한다.

기획재정위원회    도 직접    예산    신규    추진율 : 100%

예산담당관 전하식 ☎2120    경제투자예산팀장 박인희 ☎2850    담당자 김도연 ☎2851

### □ 사업개요

-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조직 신설 타당성 검토
  - 설립 필요성·효과성 분석, 설립방법 및 운영방안 연구
  - 업무 범위 및 역할 등 센터의 주요 기능 판단

☞ 소요 예산액 : 1,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 구분 | 합계    | 기투자 | 2016 | 2017 | 2018  | 2019 | 비고 |
|-------|----|-------|-----|------|------|-------|------|----|
| 센터설립  | 도비 | 1,500 |     |      |      | 1,500 |      |    |

### □ 추진상황

- ('17. 2.13)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학술연구용역 심의회 안건 제출
- ('17. 4. 5) [행정1부지사 지시] 정책과제 자체수행으로 변경 추진
- ('17. 4.21) [제3연정위원장 지시] 조례안 초안 마련
- ('17. 5~8) 정책과제 자체수행 및 주요 기능·규모·예산안 등 도출
- ('17.12. 4)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상임위 심의 의결
- ('18. 1. 4)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공포시행

### □ 향후계획

- (12월) 본예산 확보 완료
- ('18.1~2월) 센터 운영 관련 규정안 협의(도 의회, 집행부, GRI)

- 33 -

- ('18.3월) GRI 정관 등 내규 개정 및 조직 신설
- ('18.4월) 사무 공간 마련 및 인력 충원
- ('18.6월) 센터 개소

### □ 추진실적

-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검토' 정책과제 자체수행 완료('17.5~8)
-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 '18년 본예산 15억원 편성
-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18.1.4)

### □ 기대효과

- 대규모 재정투자의 건전성·효용성 제고
  - 재정투자 및 민간투자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분석을 통한 효율적 재정 운용 가능
  - 예산편성 전 사전 분석 및 사후 관리 강화로 재정운용의 책임성 제고

- 34 -

## 276 道 30억원 이상 신규사업 사전 협의

제76조(재정운용) ⑤ 경기도가 추진하는 3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해당 상임위에서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 기획재정위원회         | 도 직접 | 비예산              | 신규 | 추진율 : 100%    |
|-----------------|------|------------------|----|---------------|
| 예산담당관 전하식 ☎2120 |      | 예산총괄팀장 이계연 ☎2832 |    | 담당자 박광섭 ☎2843 |

### □ 사업개요

- 道 3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상임위에서 사전 협의 후 추진
  - 예산안 편성전 30억원 신규사업 필요성, 기대효과, 자원조달계획, 추진방식 등 상임위 협의추진

### □ 추진상황

- 「2018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잠정기준」에 “신규사업 30억원 이상의 경우” 상임위 사전협의 절차 신설(‘17.6.1)
- 실적별 소관 상임위 협의완료 : 175건(주요사업 165, 신규사업 10)

| 위원회     | 협의일자    | 협의결과(건수) |      |             | 비고   |
|---------|---------|----------|------|-------------|------|
|         |         | 계        | 주요사업 | 신규사업(30억이상) |      |
| 계       | 7.10~18 | 175      | 165  | 10          |      |
| 운 영 위   | 7.14    | 10       | 10   | 0           |      |
| 기 획 위   | 7.10    | 4        | 4    | 0           |      |
| 경 제 위   | 7.12    | 13       | 11   | 2           |      |
| 행 정 위   | 10.23   | 37       | 36   | 1           | 서면보고 |
| 문 체 위   | 7.12    | 14       | 13   | 1           |      |
| 농 정 위   | 7.11    | 23       | 22   | 1           |      |
| 복 지 위   | 7.17    | 8        | 7    | 1           |      |
| 건 설 위   | 7.13    | 27       | 24   | 3           |      |
| 도 시 위   | 7.18    | 27       | 26   | 1           |      |
| 여 가 교 위 | 7.12    | 12       | 12   | 0           |      |

### □ 향후계획

- '18년 본예산 30억이상 신규사업 반영결과 정리

### □ 추진성과

- 신규 30억원 이상 사전협의절차 신설(「2018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2017.6.1)

### □ 기대효과

- 30억원 이상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 검증을 통한 재정효율성 강화
- 신규사업에 대한 의회의 이해도를 높여 원활한 예산심의 가능

- 35 -

## 279 전국 평균 의회 인력 확보

제78조(기능강화) ① 예산·입법정책 등 의정기능을 강화하고, 도의원의 정책 분석 및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한다.

1. 도의회의 예산·입법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전국 평균의 의회인력 확보를 추진한다.

| 기획재정위원회          | 도 직접 | 비예산             | 신규 | 추진율 : 80%      |
|------------------|------|-----------------|----|----------------|
| 기획담당관 허승범 ☎ 2880 |      | 조직팀장 류호국 ☎ 4091 |    | 담당자 김현주 ☎ 4096 |

### □ 사업개요

- 도의회 예산·입법정책 기능강화를 위해 전국평균 의회인력 확보
  - 의원정수 전국 최대(128명), 의원 1인당 직원 수 1.7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
  - \* 의원 1인당 직원 수 : 전국평균 2.2명, 경기도 1.7명, 서울 2.7명

### □ 추진상황

- 도의회 지원인력 증원 및 조직 신설 요구에 따라 의정지원담당관 신설
- 「경기도 행정기구 정원 조례」 개정안 발의(‘18.2.9) : 의회사무처 6명 증원
  - 제325회 임시회 심의의결 예정, '18. 3. 30. 공포 예정

### □ 향후계획

-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기준인력 확대를 위한 건의 지속

### □ 추진실적(성과)

- '16년 9월 이후 의회사무처 9명 증원, 시간선택제임기제 11명 채용 진행 중
  -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2회 개정(‘16.9.29, ‘17.9.29)
  - \* 의회사무처 정원 : 218명( '16.7) → 223명( '16.9) → 227명( '17.9)
- 의정기능 강화를 위한 의정지원담당관 신설(3팀 11명, 정원외 인력 42명)
- 기준인력 확대 및 지역현안 수요 건의 : 총 6회
  - \* 행안부에 기준인력 확대 건의 : '16.10.17, '16.12.2, '16.12.14, '17.5.17
  - 행안위 국정감사 시 기준인력 확대 건의 : '16.10.5, '17.10.19

- 36 -

☞ **사업추진단계 및 추진율**

| 사업추진단계         | 배정 비율      | 2016      | 2017      | 2018 |     |     |     | 2019 |     | 종합 추진율    |
|----------------|------------|-----------|-----------|------|-----|-----|-----|------|-----|-----------|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
| <b>계</b>       | <b>100</b> | <b>50</b> | <b>30</b> |      |     |     |     |      |     | <b>80</b> |
| 기준인건비 확대 건의    | 70         | 40        | 20        |      |     |     |     |      |     | 60        |
| 정원 증원을 위한 조례개정 | 30         | 10        | 10        |      |     |     |     |      |     | 20        |

☞ **<주요 사업단계별 목표>**

- ▶ 기준인건비 확대 건의 총 6회 실시(회당 10점 배정)
- ▶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2회(회당 10점 배정)

☐ **기대효과**

- 의회사무처 인력 증원으로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 **문제점 및 대응방안**

- 의회 인력증원은 행정안전부가 산정하는 기준인건비 범위내에서 운용, 증원 여건의 한계
- 도의 일반직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전국 최대인 실정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증원을 감안하여 기준인력 확대 등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필요
  - ※ '17년말 기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일반직) : 전국 평균 997명, 서울 911명, 경기 3,423명

**280 입법정책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인력, 권한 확대**

제78조(기능강화) ① 예산·입법정책 등 의정기능을 강화하고, 도의원의 정책 분석 및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한다.  
 2. 도의회 입법조사·예산분석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입법정책담당관과 예산정책담당관의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실질적인 **권한확대**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 기획재정위원회          | 도 직접            | 비에산            | 신규 | 추진율 : 60% |
|------------------|-----------------|----------------|----|-----------|
| 기획담당관 허승범 ☎ 2880 | 조직팀장 류호국 ☎ 4091 | 담당자 김현주 ☎ 4096 |    |           |

☐ **사업개요**

-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및 예산정책담당관의 전문인력 보강
  - ※ 입법정책담당관 : 27명(임기제 15명), 예산정책담당관 : 20명(임기제 16명)
- 입법정책담당관 및 예산정책담당관의 권한 확대

☞ **소요 예산액 : 비예산**

☐ **추진상황**

- 의회사무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개방형 직위) 확대 방안 검토
- 입법조사 및 예산분석 기능 전담 인력 보강
- 입법정책담당관 및 예산정책담당관의 권한확대와 관련 「지방자치법」 상 근거마련 등 법령 개정 건의

☐ **향후계획**

- 의회사무처 4급 및 5급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개방형 직위 확대
- 권한확대를 위하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회장단협의회 등 관련 기관과 공조하여 법령개정 건의 지속

☐ **추진실적(성과)**

- 입법정책담당관 개방형 직위 지정 관련 규정 개정
  -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18.1.10)

- 의정기능 강화를 위한 부서 신설 및 전문인력 증원
  - 의정지원담당관 신설('17.9.29)
  - 정책조사 및 회계조사 분석지원관(시간선택제임기제) 11명 채용진행 중
  - 경기연구원 파견 전문인력(10명) 배치('17.1월)
- 관련 법령 개정 건의 : 총 2회
  - ※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 : '16.11.7
  - 시도지사협의회 실무협의회 대정부 정책 건의 : '16.11.23.

☞ **사업추진단계 및 추진율**

| 사업추진단계             | 배정비율 | 2016 | 2017 | 2017년 |     |     |     | 2018년 |     | 종합추진율 |
|--------------------|------|------|------|-------|-----|-----|-----|-------|-----|-------|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
| 계                  | 100  | 20   | 45   | 10    |     |     |     |       |     | 75    |
| 전문인력 보강            | 60   |      | 45   | 10    |     |     |     |       |     | 55    |
| 권한확대를 위한 법령개정 등 건의 | 40   | 20   |      |       |     |     |     |       |     | 20    |

〈주요 사업단계별 목표〉

- ▶ 전문인력 증원(회당 15점 배정) 및 개방형직위 지정(10점 배정)
- ▶ 법령 개정 건의 2회(회당 10점 배정)

□ 기대효과

- 의회사무처의 전문인력 확보로 보다 전문적,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

□ 문제점 및 대응방안

- 입법정책담당관 및 예산정책담당관의 권한 확대는 중앙정부 협조 및 관련 법령 개정 선행 필요,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

**282** **입법정책연구비, 의정활동보고 예산 수립**

제78조(기능강화) ① 예산·입법정책 등 의정기능을 강화하고, 도의원의 정책 분석 및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한다.  
5. 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 및 입법·예산·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의원 입법정책 연구비, 의정활동보고 예산 수립**을 추진한다.

| 기획행정위원회         | 도 직접               | 예산            | 계속 | 추진율 : 100% |
|-----------------|--------------------|---------------|----|------------|
| 예산담당관 전하식 ☎2120 | 주민참여예산팀장 정재진 ☎2844 | 담당자 김용현 ☎2123 |    |            |

□ 사업개요

- 연구용역비 예산 수립을 통한 의원 입법정책연구 및 의정활동 지원

☞ '17년도 예산편성 : 1,548백만원 , '18년도 예산 : 1,280백만원

※ 연도별 연구용역비 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
| 의원 입법활동 연구용역 | 도비 | 870  | 1,320 | 1,548 | 1,280 |

□ 추진실적

- '18년도 연구용역비 요구액 전액 예산 편성(1,280백만원)

※ 예산 편성 산출 내역

(단위 : 백만원)

| 편성목(통계목)         | 부기명             | 산출내역                  | 예산액   |
|------------------|-----------------|-----------------------|-------|
| 계                |                 |                       | 1,280 |
| 연구개발비<br>(연구용역비) | 의원연구단체별 정책연구용역  | 의원 연구단체(22)           | 400   |
|                  | 위원회별 정책연구용역     | 상임위원회(11) 및 특별위원회(11) | 300   |
|                  | 경기도의회 정책개발 연구용역 | 교섭단체(2)               | 580   |

□ 기대효과

- 입법 및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의원 연구활동을 지원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마련과 의원입법 활성화 도모

## 283-1 의원보좌관제 도입 공조

제78조(기능강화) ① 예산입법정책 등 의정기능을 강화하고, 도의원의 정책 분석 및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한다.

6.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자문위원제도와 **도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공조**한다.

기획재정위원회 **도 직접** 비예산 신규 추진율 : 70%

기획담당관 허승범 ☎ 2880 조직팀장 유호국 ☎ 4091 담당자 김현주 ☎ 4096

### □ 사업개요

- 광역의회 의원보좌관제 도입
  -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에 따라 지방의원별 업무영역 확대
  - 집행부 추진 각종 정책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분석 및 평가

### □ 추진상황

-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상 근거 마련 법령 개정 건의
- 시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신설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계류 중
  - 추미애 의원('16.7.14), 김광수 의원('16.11.25), 정병국 의원('17.5.11)

### □ 향후계획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도회회의장단협의회와 공조하여 관련 법령 개정 지속 건의

### □ 추진실적(성과)

-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실무협의회 대정부 정책건의('16.11.23)
- 행안부에 정책지원인력 도입 관련 건의('16.12.2, '16.12.14)
- 국정감사 시 의회 정책지원 인력 도입 관련 건의('17.10.19)

#### ☞ 사업추진단계 및 추진율

| 사업추진단계  | 배정 비율 | 2016 | 2017 | 2018 |     |     |     | 2019 |     | 총합 추진율 |
|---------|-------|------|------|------|-----|-----|-----|------|-----|--------|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
| 계       | 100   | 50   | 20   |      |     |     |     |      |     | 70     |
| 법령개정 건의 | 40    | 30   | 10   |      |     |     |     |      |     | 40     |
| 입법 발의   | 40    | 20   | 10   |      |     |     |     |      |     | 30     |
| 법령 개정   | 20    |      |      |      |     |     |     |      |     |        |

#### <주요 사업단계별 목표>

- ▶ 법령개정 건의 4회(회당 10점 배정) ▶ 입법 발의 3건(건당 10점 배정)

### □ 기대효과

-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통해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